

주간 통일정세

2017-2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10	北 신문 "ICBM 시험발사 시각 멀지 않아"(연합뉴스)
		北 신문, 6·10 항쟁 맞아 "민주의 새 제도 여는 투쟁"선동(연합뉴스)
	6.11	北, 건설건재공업상에 여명거리 현장지휘 박훈 임명(연합뉴스)
	6.12	北 신문, 한미정상회담 견제... "세뇌공정 될 것"(연합뉴스)
군사	6.10	군사위성 없는 北, 무인기 개발 열중...정찰·공격 다목적(연합뉴스)
	6.12	한미 해군, 괌 근해에서 3주간 잠수함훈련 돌입(연합뉴스)
	6.13	'영공 또 뚫려'...北 무인기,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배치 '찰각'(연합뉴스)
		北 TV, 한달전 '사드 부지 위성사진' 공개...무인기 소행?(연합뉴스)
		北 무인기 추정 비행체, 추력 큰 쌍발엔진...신형인 듯(연합뉴스)
	6.14	한민구 "무인기, 北소행...사드표적 획득용 틀림없다"(연합뉴스)
"하늘색 北무인기 잡아라"...軍, 탐지·격추수단 보장 고심(연합뉴스)		
경제	6.12	"중국내 북한 노동자 9만4천명...외화수입 연 수천억원"(연합뉴스)
	6.14	"평양에 상업은행 30~40개...예금이자율 중국의 3배"(연합뉴스)
		中, 북중접경 국경관광 재개...투먼~北칠보산 관광열차 운행(연합뉴스)
		"주독 北대사관 내 호텔, 건물 상업임대 금지에도 계속 운영"(연합뉴스)
사회 문화	6.10	"FAO, 북한 식량 부족국 재지정...부족량 51만"(연합뉴스)
외교 국방	6.10	北 "美 사드 당장 제땅으로 끌어가라"(연합뉴스)
		北 "美 대북제재·군사압박, 핵 뇌관 건드리는 것"(연합뉴스)
		北, '북핵 반대' 中에 "원수는 누구이고 벗은 누구냐" 불만(연합뉴스)
	6.12	日지자체들, 연이은 北미사일 대피훈련...과한 공포조장 지적도(연합뉴스)
	6.13	美, 北 ICBM 발사 언급에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연합뉴스)
		매티스 "北 핵·운반수단 추구, 속도·범위서 증대"(연합뉴스)
		北미사일 대응 더 나가는 日...이달 4개소서 요격미사일 전개훈련(연합뉴스)
		IAEA 사무총장 "북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연합뉴스)

	美, 2009년 이후 대규모 해킹 용의자로 北정부 지목(연합뉴스)
6.14	北이 차단했던 '북미 뉴욕채널' 가동...소통 지속될까(연합뉴스)
	러 항소심,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확정(연합뉴스)
6.15	NSA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北 정보당국 관여"(연합뉴스)
6.16	무인기 촬영 北 "미국이 우리 노골적 정탐"(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6. 11.

■ 北, 건설건재공업상에 여명거리 현장지휘 박훈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장관급인 내각 건설건재공업상에 여명거리 건설을 현장에서 지휘한 박훈을 임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청진 금속건설연합기업소 설립 50돌 기념보고회가 1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며 행사에 참석한 박훈을 ‘건설건재공업상’으로 소개함.
-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17일 평양 여명거리 건설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을 당시 노동신문과 인터뷰했던 박훈의 직책은 내각 제1사무국 부국장이었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6. 10.

■ 北 신문 “ICBM 시험발사 시각 멀지 않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 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밝힘.
-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이후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北 신문, 6·10 항쟁 맞아 “민주의 새 제도 여는 투쟁” 선동(연합뉴스)**

- 북한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인 10일 “남조선 인민들은 파쇼독재가 청산된 민주의 새 제도를 안아오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지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의와 진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에서 6월 인민항쟁이 있는 지도 30년이 되었지만 항쟁 열사들이 바라던 정의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남한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집권이 6월 항쟁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었다면서 “역사는 반역통치배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때까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언급함.

2017. 6. 12.

■ **北 신문, 한미정상회담 견제…“세뇌공정 될 것”(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하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 매체를 통해 견제에 나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예속의 멍에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은 “하수인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세뇌공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지금 미국은 6월 말에 있게 될 남조선 집권자와의 회담과 관련하여 주요 의제가 동맹 강화 문제가 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6. 10.

■ **군사위성 없는 北, 무인기 개발 열중…정찰·공격 다목적(연합뉴스)**

- 강원도 전방 지역 야산에서 또다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됨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군 관계자는 10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어제 수거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

체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

- 군 당국은 9일 주민 신고를 접하고 인제군 야산에서 길이 1.8m, 폭 2.4m의 하늘색 소형 비행체를 발견하였으며, 이 비행체는 크기와 모양 등이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비슷했고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음.

2017. 6. 13.

■ ‘영공 또 뚫려’…北 무인기,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배치 ‘찰칵’(연합뉴스)

-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가 후방 지역인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까지 정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영공이 또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후방지역 군사시설까지 정탐했다는 것으로, 우리 군이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은 관련 사실을 파악도 하지 못함.
-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한 무인기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 무인기에 장착된 메모리 용량 64GB(기가바이트) 일본제 소니 DSLT 카메라에서 성주 사드부지 사진 10여 장이 발견됨.

■ 北 TV, 한달전 ‘사드 부지 위성사진’ 공개…무인기 소행?(연합뉴스)

-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촬영한 것으로 13일 밝혀진 가운데, 북한 매체가 최근 사드 부지의 전경사진을 공개한 것에 관심이 집중됨.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8일 ‘도발적인 사드 배치 강행 책동으로 명백히 드러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적 정체’라는 제목의 시사대담을 방영하며 성주골프장 모습으로 주장하는 사진을 2장 공개함.
- 당시 중앙TV는 이들 사진이 ‘위성사진’이라고 언급했으며, 중앙TV는 “현재 사드 발사기는 성주골프장의 북쪽 능선 부근에” 배치돼 있다고 언급하며 골프장 상공 일부를 담은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사드 발사대 2기로 주장하는 물체는 검은색 원으로 표시함.

■ **北 무인기 추정 비행체, 추력 큰 쌍발엔진…신형인 듯(연합뉴스)**

- 북한이 대남 정찰을 위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인기는 2014년 3~4월 파주, 삼척,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와는 기종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길이 1.8m, 폭 2.4m로, 2014년 3월 말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큰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발견된 무인기들이 단발 엔진인 것과 다르게 이번 엔진은 2대를 달아 쌍발이었으며, 쌍발 엔진은 단발 엔진보다 추력이 커 비행 거리, 속도, 탑재 중량 등을 늘릴 수 있음.
- 이 엔진은 체코산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체코에서 엔진을 직수입했거나 중국을 경유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무인기는 촬영한 사진을 본부로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나. 한국 및 미국

2017. 6. 12.

■ **한미 해군, 괌 근해에서 3주간 잠수함훈련 돌입(연합뉴스)**

- 해군은 괌 근해에서 미 해군과 함께 북한의 수중도발에 대비한 한미 잠수함훈련(Silent Shark)을 12일부터 3주간 시행한다고 밝힘.
-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 능력을 키운다고 언급함.
-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1천200t 장보고급 잠수함 정운함과 P-3 해상초계기 1대, 미국 해군의 5천700t LA급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함, 구축함 1척 등 수상·수중·공중의 다양한 전력이 참가함.

2017. 6. 14.

■ **한민구 “무인기, 北소행…사드포적 획득용 틀림없다”(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표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긴급 간담회에 출석해 무인기가 사드 기지 촬영을 주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그건 틀림없어 보인다”며 “북에서 와서 성주 기지 남쪽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그는 지난달 8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성주골프장 사진은 위성과 무인기 중 무엇으로 찍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위성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무인기에 무게를 두었으며,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무인기가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언급함.
- 그는 또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유엔 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하늘색 北무인기 잡아라”…軍, 탐지·격추수단 보강 고심(연합뉴스)**

-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격추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데, 전방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측돼온 북한 무인기가 후방지역까지 임무 반경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군사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임.
- 군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후방지역까지 날아와 핵심 군사시설을 정탐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인기 탐지와 격추수단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군은 지상감시레이더를 대공 감시용으로 조정해 운영하면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용 이스라엘제 신형 레이더(RPS-42)를 도입하는 중임.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6. 14.

■ **“평양에 상업은행 30~40개…예금이자율 중국의 3배”(연합뉴스)**

- 평양에 현재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 이자는 중국은행의

3배 정도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문 연변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에서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힘.
- 최 교수가 파악한 북한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 만기 상품이 연 5.0%에 이르는데, 2년 만기는 연 6.0%, 3년 만기는 연 6.5%, 5년 만기는 연 7.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6. 12.

■ “중국내 북한 노동자 9만4천명…외화수입 연 수천억원”(연합뉴스)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9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12일 “동북3성 최대 접경도시 단둥(丹東)에 많은 북한인들이 강을 건너와 일하고 단둥 사람들도 강 건너에서 무역 기회를 찾는다”며 “이런 경제무역과 인적교류는 개혁개방 이후 중단된 적이 없으나 핵개발이 불거지면서 단둥이 큰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보도함.
- 방송은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차 핵실험이 실시된 2006년 5만764명,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7만9천600명, 2015년 9만4천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연간 총수입이 수십억 위안(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함.

2017. 6. 14.

■ 中, 북중접경 국경관광 재개…투먼~北철보산 관광열차 운행(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중 접경에서 중국과 북한 간 국경관광이 잇달아 재개됨.
- 15일 중국 양광망(央廣網)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와 북한 함경북도 철보산 일대를 둘러보는 철도관광여행이 오는 16일부터 재개됨.

-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은 투먼 통상구를 거쳐 북한 남양구에서 전용열차편으로 칠보산에 도착해 해수욕과 온천욕을 즐기고 해산물 식사, 등산 등을 할 수 있음.

2017. 6. 15.

■ **“주독 北대사관 내 호스텔, 건물 상업임대 금지에도 계속 운영”(연합뉴스)**

- 독일주재 북한대사관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독일 정부의 조치에도 북한대사관 내 호스텔이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북한대사관 내 호스텔 직원과의 14일(현지시간)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 호스텔이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었다”고 전함.
- 호스텔 직원은 통화에서 “여름 동안 유럽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6월 예약은 거의 꽉 찬 상태”라며 “7월 4일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6. 10.

■ **“FAO, 북한 식량 부족국 재지정…부족량 51만”(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51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식량 부족국가로 재지정함.

- FAO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대부분 주민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전함.
- FAO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51만t”이라며 “지난해에는 외부로부터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69만4천t에 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7% 감소한 51만t 수준”이라고 설명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6. 10.

■ 北 “美, 사드 당장 제땅으로 끌어가라”(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함.
- 북한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드’배치를 전면무효화하고 이미 끌어들인 우환단지(거리)들을 단호히 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함.

■ 北 “美 대북제재·군사압박, 핵 뇌관 건드리는 짓”(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대해 “만장약한(가득찬) 핵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우리를 적대시하는 길로 나간다면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 종말의 시간표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의 전개와 B-1B 전략폭격기 투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상의 요격시험 등을 비난하며 미국

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극히 무모하기 그지없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함.

2017. 6. 13.

■ **美, 北 ICBM 발사 언급에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전에 밝혔듯, 향후 도발에 대한 모든 대응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함.

■ **매티스 “北 핵·운반수단 추구, 속도·범위서 증대”(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핵운반수단 추구(pursuit)는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증대돼왔다”고 밝힘.
-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함.
- 매티스 장관은 이어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함.

2017. 6. 14.

■ **美, 2009년 이후 대규모 해킹 용의자로 北정부 지목(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2009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용의자로 북한 정부를 지목하고, 북한 측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라고 주문함.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컴퓨터비상대응팀(US-CERT)과 연방수사국(FBI)은 13일(현지시간) 발령한 공식경보를 통해 이같이 밝힘.
- 특히 이들 기관은 북한 정부 산하 해킹 조직의 명칭이 ‘히든 코브라(hidden cobra)’로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함.

■ **北이 차단했던 ‘북미 뉴욕채널’ 가동…소통 지속될까(연합뉴스)**

-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북미간 뉴욕 비밀 접촉임.
- 14일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6차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일 전격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6일 뉴욕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으며, 윤 특별대표와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간 접촉으로 보임.
- 이번 뉴욕에서의 북미 간 접촉은 웬비어 석방 문제가 주요 의제였지만 사실상 1년 가까이 차단됐던 ‘뉴욕채널’이 사실상 재가동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미가 처음으로 당국 간 대화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2017. 6. 15.

■ **NSA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北 정보당국 관여”(연합뉴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지난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인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함.
- NSA는 지난주 전략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찰총국이 연루돼 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이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라는 정황은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가 중국에서 정찰총국이 사용해오던 범주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되며, 해커들 사이에서는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킨 해커들을 ‘라자루스(Lazarus) 그룹’으로 부르고 있음.

2017. 6. 16.

■ **무인기 촬영 北 “미국이 우리 노골적 정탐”(연합뉴스)**

- 무인기로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은 16일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정탐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들을 집중시켜놓고 우리에게 대한 감시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각종 정찰기들과 도청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정보수

집을 맹렬하게 벌리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적외선 감시위성 여러 개를 한반도 상공으로 통과하도록 궤도를 고정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정탐행위를 감행한다면서 “최근에는 더 많은 위성들을 동원하고 정찰위성들의 궤도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상공에 대한 감시밀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함.

나. 북·중 관계

2017. 6. 10.

■ 北, ‘북핵 반대’ 中에 “원수는 누구이고 벗은 누구냐” 불만(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주변의 한 국가가 당시 미국의 전면적인 봉쇄와 핵위협 속에서 모래바람이 이는 고비사막에서 혁명을 위해 기운을 내자, 미국 놈이 우리를 얕본다, 허리를 쪽 찌기 위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원자탄을 만들자며 간고한 시련을 헤칠 때 우리 인민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열렬히 격려하고 옹호했다”고 주장함.
- ‘주변의 한 국가가 고비사막에서 원자탄을 만들자며’라고 한 대목은 중국을 가리키는데, 중국은 1950년대 말 미국의 해상봉쇄와 소련의 안보위협에 대응해 1960년대 초부터 핵 개발에 나섰으며, 1964년 고비사막에서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임.
- 이에 노동신문은 중국을 겨냥해 “도대체 원수는 누구이고 벗은 누구인가”라며 “만약 (북한과 중국의) 그런 역사마저 다 외면하는 세월이라면 우리는 핵보다 더 강한 무기도 서슴없이 쥐고 천만이 목숨을 걸고라도 인류의 눈을 멀게 하고 벗이 빠지게 하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야 말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냄.

다. 북·일 관계

2017. 6. 12.

■ 日지자체들, 연이은 北미사일 대피훈련…과한 공포조장 지적도(연합뉴스)

-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에 북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확산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도로, 일선 초등학교 등에서도 훈련이 이루어짐.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훈련이라는 것이 명분이지만, 과한 공포심 조장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극우

행보를 지속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에 지자체가 맞장구를 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해에 인접한 주부(中部)의 니가타(新潟)현에서는 이날 현내 쓰바메(燕)시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주민 100명이 참가해 북한 미사일 공격 가정 피난훈련을 하며, 오카야마(岡山)현에서는 관공서 차원의 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2017. 6. 13.

■ 북미사일 대응 더 나가는 日...이달 4개소서 요격미사일 전개훈련(연합뉴스)

-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잇달아 실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위성이 요격미사일 전개훈련까지 실시키로 해 과잉대응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13일 NHK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오는 15일부터 전국 4개소 기지와 주둔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처에 필요한 전술 기량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라. 북·러 관계

2017. 6. 14.

■ 러 항소심,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 확정(연합뉴스)

- 지난해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북한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패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됨.
-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통신 '데이타루'에 따르면 연해주 법원에서 13일(현지 시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북한 선원에게 4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함.
- 연해주 나훗카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 폭행 사건에 가담한 북한 선원에게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6. 13.

■ IAEA 사무총장 “북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함.
- 유엔본부에 따르면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IAEA본부에서 가진 운영이사회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이 유감스럽다”면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IAEA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할 것도 요구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11		오바마, 퇴임 뒤 활발한 해외 순방...내달 한국 방문(연합뉴스)
			美 고위 당국자 “韓 ‘사드배치 합의유지’ 확답받았다”(연합뉴스)
	6.12	한미 해군, 광 근해에서 3주간 잠수함훈련 돌입(연합뉴스)	
	6.14	한미외교차관 “정상회담서 북핵 근원적 해결 전략 논의”(연합뉴스)	
			美 국무차관 “사드, 양국 만족할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연합뉴스)
6.15	북한과의 대화 ‘입구’ 놓고 한미정상회담 조율 주목(연합뉴스)		
			페리 전美국방 “대북제재, 한미중 협력이 필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11		中매체 “사드배치는 결국 한미관계에 좌우될 것”(연합뉴스)
	6.12		中, ‘사드보복 지속’...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 통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9		日아베 “韓, 중요이웃”...특사는 “위안부 재협상 바보같은 소리”(연합뉴스)
	6.10		日아베 특사 “모두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것”...위안부 언급 안해(연합뉴스)
	6.12	文, 친서 들고온 日특사에 “위안부 합의 못받아들여...시간필요” (연합뉴스)	
		정부, 日특사 ‘간계’ 발언에 주의촉구...“신중할 필요”(연합뉴스)	
	6.13		日관방, 文대통령 위안부합의 비판에 “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6.14		일본, 韓·中에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사 타진(연합뉴스)
	6.15		日, 韓독도훈련에 “수용못해” 억지...해군 “우리땅, 훈련 당연”
		외교부 “日 ‘독도 표기 신고’ 고지에 대응중”(연합뉴스)	
6.16		日영토담당장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망언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11	美中정상 약속 '포괄대화' "이달하순 워싱턴개최...北대응 논의"(연합뉴스)		
	6.13		中, 美의 중소기업·개인 대북거래 중단요구에 "간섭 말라"(연합뉴스)	
	6.14	美中 해군함정 상호방문 재개...남중국해 갈등 가라앉나 (연합뉴스)		
	6.15			中, 美국방의 중러 위협론에 '발끈...'우리는 2차대전 공현국"(연합뉴스)
				中·日·유럽 복잡해진 쟁점...돈줄죄기 고심하나(연합뉴스)
			중국에 장벽 높이는 美...자국기업 인수합병 등 제한 추진(연합뉴스)	
6.16		中·파나마 수교에 美 '기다린듯' 대만에 무기판매 가속		
			美中 외교안보대화 앞두고 '기싸움'...美창과 中방패 대결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9	"日호위함들, 동해서 이달 3~9일 美항모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10	'러시아 스캔들'에 빠진 트럼프, 다음 달 푸틴 만난다(연합뉴스)		
	6.15		푸틴, 美대선 개입의혹 부인..."해킹	

			진원지 찾기 어려워”(연합뉴스)
			러 재무 “美 금리인상, 러 경제에 큰 영향 안 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10		日, 내년 中 시진핑 방일 추진…성사시 中정상 10년만의 日 방문(연합뉴스)
	6.12	센카쿠 해역 침단 해경선 전시장되나…中·日 합정 건조 경쟁(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6.13		러시아, 日배타적경제수역서 해양조사…日정부 중단 요구(연합뉴스)
	6.14	日, 자국민 쿠릴열도 방문에 화들짝…“실효지배 인정비칠라”(연합뉴스)	
	6.15		주일 러 대사관 이례적 강연…“사드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6. 11.

■ 오바마, 퇴임 뒤 활발한 해외 순방...내달 한국 방문(연합뉴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부쩍 활발해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조명하며, 오는 7월에는 한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함.
- NYT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달에는 한국을 방문해 그가 재임시절 관계를 쌓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정치가 개입될 수 있다고 전함.
-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중단했으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국에 사드 비용을 청구하며 날을 세웠던 사실을 지적함. 이어 다음날 허버트 맥매스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전화를 걸어 미국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함.

■ “美 고위 당국자 “韓 ‘사드배치 합의유지’ 확답받았다”(연합뉴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드 배치 합의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워싱턴 발로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 관리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체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Prelude)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전 공약들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분명히 했다(assured)”며 “미국은 한국에 같은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함.

2017. 6. 12.

■ **한미 해군, 괌 근해에서 3주간 잠수함훈련 돌입(연합뉴스)**

- 해군은 괌 근해에서 미 해군과 함께 북한의 수중도발에 대비한 한미 잠수함훈련 (Silent Shark)을 12일부터 3주간 시행한다고 밝힘.
-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 능력을 키운다고 말함.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1천200t 장보고급 잠수함 정운함과 P-3 해상초계기 1대, 미국 해군의 5천700t LA급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함, 구축함 1척 등 수상·수중·공중의 다양한 전력이 참가함.
- 양국 해군은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공격하는 통합대잠전과 자유공방전, 잠수함 대 잠수함훈련 등 훈련을 실전처럼 강도 높게 진행함.

2017. 6. 14.

■ **한미외교차관 “정상회담서 북핵 근원적 해결 전략 논의”(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방한중인 토머스 새넨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이달 29~3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세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제를 조율함.
-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양국 신정부 하 첫 한미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외교부는 아울러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제재와 대화 등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힘.

■ **美 국무차관 “사드, 양국 만족할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연합뉴스)**

- 토머스 새넨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work on)”이라고 말함.
- 새넨 차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 의제 등을 협의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안보에

- 대한 철통같은 공약이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양국) 공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새년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미사일 발사, 연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함.

2017. 6. 15.

■ **북한과의 대화 ‘입구’ 놓고 한미정상회담 조율 주목(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 조율의 향배가 주목됨.
-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함. 이는 북핵 협상과 남북대화의 입구로 가는 유일한 관문으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힐러슨 장관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홍석현 대통령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재개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음. 하지만 미국이 최근 대북 원유 수출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대북 압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에 한국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페리 전미국방 “대북제재, 한미중 협력이 필수”(연합뉴스)**

- 제임스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한국과 미국,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밝힘.
-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미연구소(USK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핵심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패키지’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함.
- 페리 전 장관은 “완전히 다른 대북관을 지닌 이들 3개국이 어떻게 공통의 협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큰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이 동반자로 함께 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7. 6. 11.

■ **中매체 “사드배치는 결국 한미관계에 좌우될 것”(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는 결국 한미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함.
- 11일 중국 관영 환구망은 ‘사드 용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계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환경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친소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평가함.
- 신문은 하지만 한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사업승인 전(前) 단계인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함.

2017. 6. 12.

■ **中, ‘사드보복 지속’…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 통보(연합뉴스)**

- 12일 롯데 측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최근 중국 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를 통보함. 이번 영업정지 통보는 3월초 처음 영업정지가 된 뒤 4번째로 기한은 7월 초까지로 확인됨.
- 롯데 측은 영업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중국당국에 현장점검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최근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와 중국 특사단 방중 등으로 한중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해킹으로 폐쇄됐던 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두 달여 만에 재가동되기도 했지만, 롯데를 겨냥한 영업정지 등 중국당국의 실질적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변함이 없음.

다. 한·일 관계

2017. 6. 9.

■ **日아베 “韓, 중요이웃”…특사는 “위안부 재협상 비보같은 소리”(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총리 특사로 방한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 간사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 친서를 전달하며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고 NHK 방송이 9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만나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이웃”이라며 “정상 간 교류와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가고 싶다”고 당부함.
- 그러나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인 상당수가 재협상을 원한다는 얘기에 “서로 이야기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이 돈도 지불했는데 처음부터 재협상하자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함.

2017. 6. 10.

■ 日아베 특사 “모두와 협력해 최선 다할것”…위안부 언급 안해(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함.
- 이나다 방위상에 따르면 한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GSOMIA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
-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GSOMI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2017. 6. 12.

■ 文, 친서 들고온 日특사에 “위안부 합의 못받아들여…시간필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아베 총리의 친서(親書)를 전달받은 뒤 이렇게 말하고 “이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문 대통령은 다만, “양국이 그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가선 안 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함.

■ **정부, 日특사 ‘간계 발언에 주의촉구…“신중할 필요”(연합뉴스)**

-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중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방한 일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짐.
- 니카이 특사는 방한 첫날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줌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가야 한다”며 “한국 안에도 한 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견하면 박멸해달라”고 말함.
- 니카이는 한일 우호를 호소하는 문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017. 6. 13.

■ **日관방, 文대통령 위안부합의 비판에 “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 언급을 한 데 대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재작년 합의는 한일 양국의 약속으로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거듭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착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7. 6. 14.

■ **일본, 韓·中에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사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의사를 물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면서 성사되면 일본에서 6년 만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함.

-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7월 19~21일 혹은 같은 달 24~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은 회답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중국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하게 됨.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주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정부는 한중일이 모두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만큼 회의에서 3국간 타협점을 찾으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17. 6. 15.

■ 日, 韓독도훈련에 “수용못해” 억지…해군 “우리땅, 훈련 당연”(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5일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함.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가나스기 국장은 이같이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이 사전에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는데도 이번 훈련이 개시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NHK는 보도함.
- 앞서 우리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올해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힘.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에 관한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함.

■ 외교부 “日 ‘독도 표기 신고’ 고지에 대응중”(연합뉴스)

- 세계 70여개 국의 일본 재외공관은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 및 일본해 호칭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국 입장에 상반되는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함.
- 외교부는 일본의 재외공관들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와 동해 표기 관련 신고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이같은 동향을 이미 파악해 대응 중에 있다”고 밝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우리 민족이 2천년 이상 사용해 온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국내외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독도 표기 오류 시정,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6. 16.

■ **日영토담당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망언(연합뉴스)**

-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16일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취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말함.
- 마쓰모토 담당상은 “외무성·방위성 등과 함께 일본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정확한 이해가 널리 침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6. 11.

■ **美中정상 약속 ‘포괄대화’ “이달하순 워싱턴개최…北대응 논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신설기로 약속한 ‘포괄대화’ 첫 회의가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미중 양국이 최근 4주 연속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겨냥해 ‘외교·안보’ 분야 논의를 선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미중 양국이 목표로 정한 ‘100일’ 기한을 앞두고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이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측에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군 고위 관료가 참가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짐.

2017. 6. 13.

■ **中, 美의 중소기업·개인 대북거래 중단요구에 “간섭 말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다른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3일 미국의 대북거래 중단 요구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우선 “중국은 어떤 국가든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 혹은 개인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함. 이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일관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덧붙임.
- 중국 외교부는 또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만약 규정을 위반한다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함.

2017. 6. 14.

■ **美中 해군함정 상호방문 재개...남중국해 갈등 가라앉나(연합뉴스)**

- 미국의 해군 함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남중국해 함대의 모항을 방문하며 양국 해군 간 교류가 재개됨. 14일 중신망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3함대 소속으로 해병 380명이 탑승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스테렛(USS Sterett)이 전날 남중국해(중국명 남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잔장(湛江)항에 도착해 닷새간 우호방문 일정을 시작함.
- 양국 해군은 군함을 상호 참관한 뒤 군함 간 통신 교환, 편대 구성과 함께 ‘해상 돌발조우 준칙’에 따른 연습과 해상 합동구조 훈련도 한다. 잔장시 특수학교 방문과 양국군 간 축구·농구 등 체육행사도 갖게 됨.

- 미 태평양함대는 스테렛함의 방중에 앞선 성명을 통해 “2015년 이후 미국 해군의 첫 잔장항 방문이며 올해 들어 미국 함정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2017. 6. 15.

■ **中, 美국방의 중리 위협론에 ‘발끈’...“우리는 2차대전 공헌국”(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들여 쌓아온 국제질서의 핵심적 측면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반박함.
- 루 대변인은 “2015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행사를 열고, 승리의 성과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함.

■ **中·日·유럽 복잡해진 셈법...돈줄지기 고심하나(연합뉴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짐. 중국과 일본, 영국은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치 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처럼 양적완화의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 이후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충분히 방어벽을 쳐둔 상태임. 일본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슬며시 자산매입규모를 줄이는 ‘스텔스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이날 인민은행은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그대로 동결함. 이는 지난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직후 중국도 시중금리를 일제히 올렸던 것과 상반된 모습임. 투자은행들은 중국 당국이 그간 자본유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내놔던 정책이 충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내다봄.

■ **중국에 장벽 높이는 美·자국기업 인수합병 등 제한 추진(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분인수 등 투자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이러한 조치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반도체 기업, 원전산업, 중요 인프라, 군기지나 국가보안시설 주변 부동산 등에 대한 인수, 합병,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시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임.
 - 의회 관계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국가안보 관련 심사 기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기 위한 CFIUS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회 측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전함.

2017. 6. 16.

■ **中·파나마 수교에 美 ‘기다린듯’ 대만에 무기판매 가속(연합뉴스)**

- 중국과 파나마의 전격적인 수교가 이뤄진지 이틀만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며 판매안을 마련하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 미 정부는 현재 대만에 대해 첨단 로켓 시스템과 대함 미사일을 포함하는 대규모 신형무기를 판매하는 패키지를 마련 중임. 거래 규모는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승인했던 18억 달러(2조327억원)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특히 중국이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의 대외활동 공간을 위축시키며 파나마와 전격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과 관련이 있음.

■ **美中 외교안보대화 앞두고 ‘기싸움’…美장과 中방패 대결(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북핵문제, 중국의 압박에 따른 대만 단교사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동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음.
-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의회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임.

- 이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의 팡중잉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이 발언은 중국과 대만 모두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국은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만 고립화 정책을 펴는 데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나. 미·일 관계

2017. 6. 9.

■ “日호위함들, 동해서 이달 3~9일 美항모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는 헬기 탑재 호위함 ‘휴가’와 호위함 ‘아시가라’가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을 했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휴가와 아시가라는 이 기간 동해에서 오키나와(沖繩) 동쪽 먼바다에 걸쳐 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을 벌임. 항공자위대의 F15전투기와 E2C 조기경계기도 6일 오키나와 동쪽 먼바다에서 항공모함 탑재기인 EA18 전자전기(電子戰機)와 함께 훈련에 참가함.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은 각종 전술훈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7. 6. 10.

■ ‘러시아 스캔들’에 빠진 트럼프, 다음 달 푸틴 만나다(연합뉴스)

- ‘러시아 스캔들’로 발목이 붙잡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함.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번 회동에 큰 관심이 쏠림.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와 러시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덮으려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음.
-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 중 한 곳에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준수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함.

2017. 6. 15.

■ **푸틴, 美대선 개입의혹 부인...“해킹 진원지 찾기 어려워”(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살롱닷컴이 보도함. 이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해킹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을 이어간 것임.
- 푸틴 대통령은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대선 해킹의 배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그의 언급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해킹이 노트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면서 “해킹의 진원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함.
- 그는 러시아가 해킹 배후라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반감을 일으키며 러시아 국내 정치를 혼란케 하려는 ‘거짓말’로 규정함.

■ **러 재무 “美 금리인상, 러 경제에 큰 영향 안 줄 것”(연합뉴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러시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밝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은 예상됐던 것이며, 이는 원자재 시장과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익숙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러시아는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견실한 국제수지,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본 유출 위험은 없으며 (러시아 통화) 루블화는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 여전히 매력적인 외화”라고 강조함.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이 러시아의 국채 발행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자본 시장에서 30억 달러를 조달하려는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7. 6. 10.

■ 日, 내년 中 시진핑 방일 추진...성사시 中정상 10년만의 日 방문(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내년 하반기 중 국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 시 주석의 방일이 성사되면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 주석 이후 10년만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됨.
- 통신은 북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시 주석의 국빈 방문과 관련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신은 야치 국장이 아베 총리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이 이후 일본을 찾는 흐름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함.

2017. 6. 12.

■ 센카쿠 해역 침단 해경선 전시장되나...中·日 합정 건조 경쟁(연합뉴스)

- 12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동중국해에 출현하는 중국 해경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8 회계연도'에 신형 프리깃함 2척을 건조하기로 함.
- 건조기한 4년인 이 프리깃함은 방공미사일과 레이더, 어뢰 등 기본 무기장비를 탑재하는 한편 배수량을 20% 줄여 건조비용을 30% 감축하게 됨. 이는 해경선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되 무장력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중국 군사전문가 인궈(尹卓)는 “이들 프리깃함의 배수량이 4천t에 달해 구축함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며 “다오위다오 부근에 나타나는 중국 해경선에 맞서 양측의 대치가 격화될 것”이라고 말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6. 13.

■ 러시아, 日배타적경제수역서 해양조사…日정부 중단 요구(연합뉴스)

- 러시아가 홋카이도(北海道) 연안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가 일본 EEZ내에서 해양조사를 한 사례는 지난 10년간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1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일본 EEZ내인 홋카이도 소야미사키(宗谷岬) 북서쪽 50km 해역에서 러시아 조사선(2천800t)을 발견함. 일본 순시선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EEZ내에서 동의 없이 조사활동을 하는 거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함. 해상보안청의 연락을 받은 외무성도 같은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함. 이에 러시아 선박은 오후 1시께 일본 EEZ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짐.
- 요미우리는 5월 말께 러시아 선박이 일본 EEZ내에서 해양조사를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외무성이 러시아에 조사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해상보안청이 주변 해역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전함.

2017. 6. 14.

■ 日, 자국민 쿠릴열도 방문에 화들짝…“실효지배 인정비철라”(연합뉴스)

- 일본인이 포함된 관광객들이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최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가 방문 자제를 재차 요청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이들이 러시아의 비자를 발급받아 북방영토 관광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40여명이 지난 11일 북방영토의 한곳인 에토로후(擇捉)를 방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이들은 영국과 스위스, 뉴질랜드 관광객들과 함께 에토로후에 내려 약 6시간 머물며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비자를 발급받아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자국민에 대해 이 지역 방문 자제를 요구해 왔음.

2017. 6. 15.

■ **주일 러 대사관 이례적 강연…“사드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 주일 러시아대사관이 미국이 배치를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과 관련, 이례적 강연회를 열어 이를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고 NHK 방송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도쿄 주재 러시아대사관 비리체프스키 드미트리 공사와 담당 무관은 이날 일본 매체 기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MD 시스템과 관련한 러시아 입장에 대해 강연을 개최함. 강연 중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구실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MD 시스템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사일은 실제로는 공격에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함.
- 러시아대사관이 이런 강연을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MD 시스템에 일본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 측의 우려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6.13	제임스 리, “평양공항에서 김상덕 교수와 함께 있었다”(자유아시아방송)
	6.14	美, 6자회담 수석대표 전격 평양행…웬비어 석방 끌어내(연합뉴스)
		北 억류 미국인 ‘석방사절’, 비중있는 정치인→당국자로 변화(연합뉴스)
		필 로버트슨 “웬비어 혼수상태, 북에 책임 추궁해야”(자유아시아방송)
	6.15	캐나다, “북 억류 입 목사 건강 매우 우려, 석방 최우선 과제”(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착취 만연…北노동자 등 17명 사망(연합뉴스)
		美 국무부, “웬비어 석방, 미-북 대화 재개와 별개”(미국의 소리)
	6.16	미국, 북한 억류 미 대학생 혼수상태 귀환에 격앙(미국의 소리)
		美 전문가들 “웬비어 석방 후 미북관계 어려워질 것…북한 오관”(미국의 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6.10
6.12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 부족량 51만t(미국의 소리)
6.14		北, 탈북 여종업원 송환 공세 재개…“한국 내부 분열 노려”(미국의 소리)
6.15		北, 외무성 대사 “인권 대화·협력에 응할 용의 있어”(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6.9	프리덤하우스 ‘북한 평양-지방 격차 심화’(미국의 소리)
	6.12	통일부, “북한 선원 2명 NLL서 송환”(자유아시아방송)
	6.13	탈북여성 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미국의 소리)
	6.14	한국 정부, 대북접촉 3건 추가 승인…북한 거부 뒤 처음(미국의 소리)
	6.16	북송 희망 김련희·여종업원 北 송환 촉구 회견(연합뉴스)
대북지원	6.13	브로커에 속아 탈북…북송요구 탈북민 또 등장(연합뉴스)
	6.16	英 대북지원단체, 다음주 방북…밀가루 40t 지원(연합뉴스)
		뉴질랜드, 2008년부터 북한에 15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미국의 소리)
	6.16	뉴욕 인권회의 참석 北관리, 유엔기구에 대북지원 요청(자유아시아방송)
		美 NGO, 북한에 영양 쌀 28만 5천 켤 지원(미국의 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6. 13.

■ 제임스 리, “평양공항에서 김상덕 교수와 함께 있었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교수가 평양에서 체포될 당시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캐나다인이 있음.
- 캐나다에서 보안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리(James Leigh) 씨가 북한을 지난 4월 22일 방문함.
-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출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가 북한 당국에 붙잡힌 바로 그 날임. 제임스 리 씨는 당시 평양 순안공항 안에 마련되어 있는 구금실에서 이동식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김 씨와 함께 있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김 씨는 리 씨에게, 북한당국은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쳐서는 안될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붙잡힌 것이라고 설명함.

2017. 6. 14.

■ 美 6자회담 수석대표 전격 평양행…웬비어 석방 끌어내(연합뉴스)

-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22)의 석방을 끌어냄.
- 윤 특별대표는 또 평양방문에 앞서 북측과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와 지난주 뉴욕에서 잇따라 사전접촉을 가짐.
- 웬비어의 석방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도 아닌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북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등과 관련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윤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이른 오전 북한에 도착해 동행한 두 명의 의료진과 함께 웬비어를 만났으며 북측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을 요구했음.
- WP는 윤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의료팀과 항공편이 준비됐다고 보도, 윤 특별대표가 북중간 정기항공편이 아닌 별도의 미측 항공기를 이용했을 것으로 관측됨. 웬비어는 다음날인 13일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으나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짐.

- 미 국무부와 백악관 측은 윤 특별대표의 평양행에 앞서 북미 간 사전접촉 사실도 확인함. 국무부는 윤 특별대표가 지난달 오슬로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를 만났고, 이 접촉에서 북측은 워비어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 중이던 4명의 미국인에 대한 영사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AP는 전함.
- 윤 특별대표와 북측 외무성 관계자들 간의 오슬로 접촉은 지난 5월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간 1.5트랙(반민반관) 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1.5트랙 대화에 북측에서는 '미국통(通)'인 최설희 외무성 미국국장 등이, 미국 측에선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과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주재 대사, 윌리엄 펠런 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등이 참석했음.
- 또 오슬로 접촉에 이어 북측이 추가 접촉을 강력히 요구해 지난 6일 윤 특별대표와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뉴욕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짐. 백악관 관계자는 북미 간 뉴욕 접촉에서 윤 특별대표가 워비어의 상태를 전해 들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워비어의 상태를 보고받고 석방을 위해 윤 특별대표를 전격적으로 파견한 것으로 보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함.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 인사의 방북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특히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북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됨.

■ 北 억류 미국인 '석방사절', 비중있는 정치인→당국자로 변화(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함께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22)를 석방하면서 과거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 사례에 관심이 쏠림.
-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 고위 인사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 미국인을 풀어주는 패턴을 보여왔음. 그러나 과거에는 전직 대통령 등 상징적 의미가 큰 고위 정치인들이 '석방 사절'로 활용됐다면, 최근에는 윤 특별대표와 같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주로 방북해 억류자 문제를 매듭짓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비중 있는 정치인이 억류자 문제 ‘해결사’로 나선 대표적 사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2009년 8월 방북임.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 중이던 로라 링, 유나 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방북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면담했음.
- 그러나 최근 미국 당국자들의 방북을 통한 억류자 석방은 더욱 실무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임. 2014년 11월에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가 풀려났지만, 북미 간의 추가 대화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북한은 2013년 12월 메릴 뉴먼, 2014년 10월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이례적으로 미국의 특사 파견 없이 풀어주기도 했음.

■ **필 로버트슨 “웬비어 혼수상태, 북에 책임 추궁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부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0대의 건강한 미국 대학생이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된 데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이 웬비어 씨와 그의 가족에게 극도로 부당한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억류 기간 중 웬비어 씨에게 누가, 어떤 행위를 가했는지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힘.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정치적 협상 도구로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을 억류했던 경우에도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이번 행동이 한층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일본, 태국 즉 타이 등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수 많은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수용소보다 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인권에도 국제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함.

■ **캐나다 “북 억류 임 목사 건강 매우 우려, 석방 최우선 과제”(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외교부의 조슬린 스위트 대변인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영사 업무 담당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캐나다 정부는 계속되는 억류로 인한 임 목사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캐나다 정부에 있어 절대적인 우선 순위에 놓여 있음.

- 북한에 17개월째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웹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석방되면서 임 목사의 건강과 영사 접견 여부, 석방 노력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스위트 대변인은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않은 캐나다 정부를 대신해 평양주재 스웨덴 즉 스웨리에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2017. 6. 15.

■ 러시아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착취 만연...北노동자 등 17명 사망(연합뉴스)

- 개막을 1년 앞둔 2018년 러시아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인권 착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현재까지 17명에 달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밝힘. HRW가 14일(현지시간) 펴낸 ‘레드카드 : 러시아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 착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곳곳의 월드컵 경기장과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됨.
- 이들은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에 대처할 방안도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꼬집음.
- 앞서 노르웨이의 한 축구잡지는 이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100여 명이 휴일도 없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국제축구연맹(FIFA)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투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함.
-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시위도 잇따라 지난 4월 로스토프나도누 지역 현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도 함.

■ 美, 국무부 “웹비어 석방, 미-북 대화 재개와 별개”(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웹비어 씨의 귀환 과정에 미 정부 당국자가 깊숙이 관여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함.
-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VOA’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웹비어 씨 후송을 위해 방북한 것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과 관련된 사건을 완전히 “별개의 사안(separate issue)”으로 다룬다는 설명함.
- 이 관리는 조셉 윤 특별대표가 웹비어 씨 석방 노력을 기울여온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확인하면서, 이 방안이 웹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었다는 걸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함.

- 앞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북 간 비밀 접촉과 미 고위 관리의 방북이 두 나라 간 직접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음.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함.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7. 6. 16.

■ **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확대법안 美 하원소위 통과(연합뉴스)**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 이 매체들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HR 2016)을 통과시킴.
-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돼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음.
- 이 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두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하원 아태소위가 이날 함께 통과시킨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RFA는 보도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유린 우려” 이어져(미국의 소리)**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음. 하지만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음.
-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음.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음.

-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공개처형과 고문, 주민들의 노예화,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문제 등을 지적했음.
- 영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음.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며 실망감을 표시했음.
- 그러면서, 북한이 COI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고, 특히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6. 10.

■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 부족량 51만(미국의 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함.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대부분 주민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봄.
- 그러면서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51만에 달한다고 밝힘. 지난해에는 외부로부터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69만4천에 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7% 감소한 51만 수준임.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밀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2017. 6. 12.

■ 北, 탈북 여종업원 송환 공세 재개...“한국 내부 분열 노려”(미국의 소리)

-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중 한국에 집단망명한 여종업원 12명과 남성지배인을 송환하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음. 북한은 이들의 망명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계획해 벌인 유인·납치극이라고 주장해 왔음.

- 지난 5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적극성을 띠고 있음.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지난 8일 여종업원 김설경 씨의 어머니가 딸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영상편지를 내보냄.
-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여종업원 리지에 씨의 아버지 리경수 씨가 딸을 그리워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며 리 씨의 유서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음.
- 북한은 또 이들의 송환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음.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들의 송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힘.

2017. 6. 14.

■ 北 외무성 대사 “인권 대화·협력에 응할 용의 있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가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와 협력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리홍식 북한 외무성 대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우리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그러나 리 대사는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날조 자료들을 근거로 들고나오는 극도로 정치화된 인권 논의나 협력은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수용했지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2017. 6. 15.

■ 프리덤하우스 ‘북한 평양-지방 격차 심화’(미국의 소리)

-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4일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힘, 지난 1월 발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이날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식량과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나은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최근 평양이 보다 호화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분이 거주 지역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기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심지어는 상점에 대한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또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함.
-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 모든 언론매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극도의 감시와 검열 대상이며, 국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정부와 교육기관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음. 아울러 종교와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힘.
- 보고서는 외국인 억류도 비판함.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억류해 강제 자백을 받아 내고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억류자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임.
- 이밖에 북한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위 공직과 공공 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적다는 사실도 지적함.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상황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6. 9.

■ 통일부 “북한 선원 2명 NLL서 송환”(자유아시아방송)

- 오늘 오전 9시경 북한선박 1척과 북한 선원 2명을 동해상 인계 지점에서 북측에 송환하였음. 9시 전에 북한 경비정이 NLL상의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음.
- 남측 해군과 해경은 지난 2일과 3일 동해 상에서 각각 선원 1명과 3명이 탄 북측 선박을 한 척씩 구조함. 이 중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게 되었음.

- 구조 당시 북측 어선 1척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돼 나머지 한 척만 돌려 보냈음. 남측 정부는 지난 8일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하고 2명은 송환한다는 계획을 북측에 통보함.
- 북측 선원 2명이 남측에 잔류함에 따라 북측 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북측은 그동안 선원들의 귀순 결정이 나오면 “남측이 억류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해왔음. 그럴 때마다 남측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함.

2017. 6. 12.

■ **탈북여성 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미국의 소리)**

- 한국의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탈 여성 성폭력 동료상담원 양성교육이 열리고 있음. 동료상담원이 되기 위해 지원한 북한이탈 여성들은 2:1의 경쟁률을 뚫고 30명이 선발되었음.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 남한 일반 여성에 비해서 6배나 많은 성폭력 피해 건수가 있음. 이렇게 범죄가 북한에서는 성폭력 교육, 성교육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탈북 과정이나 이런 북한에서 생활에서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들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교육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변화가 교육의 목적임.

2017. 6. 13.

■ **한국 정부, 대북접촉 3건 추가 승인...북한 거부 뒤 처음(미국의 소리)**

- 한국 정부는 오늘(13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 3건을 추가로 승인했음. 통일부 당국자는 ‘나눔인터내셔널’과 ‘남북함께살기운동’, 그리고 ‘국체푸른나무’ 등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이번 승인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추가 승인은 북한이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 요청을 거부한 뒤 8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한국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음.

2017. 6. 14.

■ **복송 희망 김련희·여종업원 北 송환 촉구 회견(연합뉴스)**

-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복송을 요구하는 탈북여성 김련희씨와 지난해 4월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모두 북한에 돌려보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비롯한 3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14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부당하게 강제 억류되어 있는 김련희씨와 12명의 여종업원을 조건 없이 송환하라”고 촉구함.
- 이들은 또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송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함.

2017. 6. 16.

■ **브로커에 속아 탈북...복송요구 탈북민 또 등장(연합뉴스)**

-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민이 또 등장했음. 탈북민 권철남(44)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핏에 빠져 2014년 8월 9일 탈북했다”면서 “같은 해 11월 14일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인 브로커가 3일 동안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열악한 노동관에서 탈북민으로 괘시를 받으며 살았고,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전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골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음.
- 탈북민 신분을 밝히며 복송을 요구하는 사례는 김련희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비롯한 35개 단체는 지난 14일 정부에 김씨의 복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함.

4. 대북지원

2017. 6. 13

■ 英 대북지원단체, 다음주 방북...밀가루 40t 지원(연합뉴스)

- 영국 비정부기구(NGO)가 다음 주 방북해 북한 어린이를 위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40t을 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영국 대북지원 민간단체 ‘북녘어린이사랑’의 조지 리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우리 단체의 평양 방문이 허락됐다”며 이달 19~24일 방북한다고 밝힘.
- 그는 이 단체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빵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을 위해 40t의 밀가루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북녘어린이사랑 관계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단체가 앞서 두 차례 방북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방북이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2008년부터 북한에 15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미국의 소리)

- 뉴질랜드 외교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에 뉴질랜드 달러화로 21만 5천 달러, 미화 15만 5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힘.
- 뉴질랜드 외교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뉴질랜드 민간단체 ‘납세자조합 (Taxpayers’ Union)’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힘.
- 이 단체가 공개한 정부 답변서에 따르면, 지원 건수는 총 15건으로, 북한 고아 지원 사업과 식량 가공장비 구입,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 트랙터와 트레일러 구입, 직업훈련시설 건설 등이 포함됨.
- 뉴질랜드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서울주재 뉴질랜드대사관이 자체 기금을 통해 미화로 연간 약 2만2천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함.
- 지원금은 식량 공급과 위생 사업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외국의 비정부기구에 제공됐다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밝힘. 특히 북한 정부에 직접 전달된 지원금은 없었으며, 대사관 기금 제공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힘.
-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 같은 지원이 지난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2017. 6. 16

■ **뉴욕 인권회의 참석 北관리, 유엔기구에 대북지원 요청(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유엔기구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 RFA는 제10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리홍식 북한 외무성 대사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 UNICEF, UNDP는 평양에 상주하면서 대북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구들임.

■ **미 NGO, 북한에 영양 쌀 28만 5천 킬로그램 지원(미국의 소리)**

-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라이즈 어게inst Hunger’(Rise Against Hunger)’는 최근 북한에 28만5천여 명분의 영양 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라이즈 어게inst Hunger’의 캐런 쿡 언론담당관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25일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 쌀 28만 5천 킬로그램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 이 단체는 지난 2월에도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 쌀 28만 3천 킬로그램을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음.
- 쿡 담당관에 따르면 라이즈 어게inst Hunger가 올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영양 쌀은 총 57만 킬로그램에 달함. 쿡 담당관은 이 영양 쌀이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